

요약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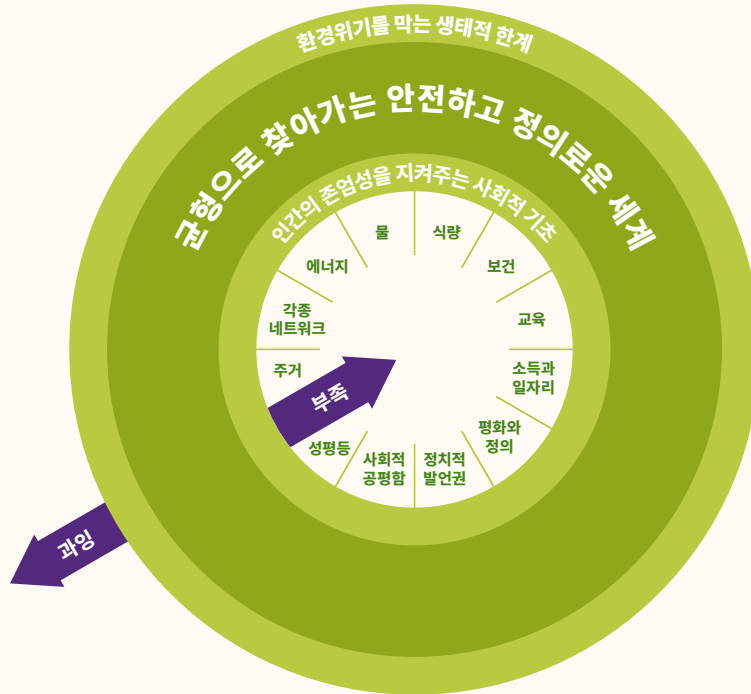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한국 불평등;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

사람과 지구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정의로운 세상, 도넛



이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0번 목표인 불평등 감소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Raworth, K. (2017), Doughnut Economics: seven ways to think like a 21st century economist. London: Penguin Random House.

옥스팜의 '도넛'이란?

옥스팜의 전 연구원이자 경제학자인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기초'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 한계'를 두 개의 원으로 설명합니다.

이 두 원 사이의 공간이 바로 인류가 안전하고 정의롭게 번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불평등 완화는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도넛 안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소수에게 자원이 편중되면 공동체와 환경의 미래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옥스팜은 전 세계 현장에서 긴급 구호와 인도적 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불평등 감소를 위해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옥스팜의 도넛'은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입니다.

감사의 말

주저자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
전하람 전남대 교육학과 부교수
김윤정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보조연구원

우한수 국가데이터처 통계사무관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제공해주신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연구본부장
변수용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교육정책학과 교수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실장

편집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발행인 지경영 옥스팜코리아 대표

발행일 2026년 2월 23일

Copyright © 2026 옥스팜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출처를 명시한 비상업적 인용은 허용되나, 보고서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재사용하거나 번역·각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0번 목표인 불평등 감소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 장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진의 독립적 견해이며, 옥스팜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OXFAM
옥스팜

발간사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의 기근 속에서 시작된 옥스팜은 “누구도 가난과 불평등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80년 넘게 전 세계 현장에서 사람 중심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긴급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옥스팜 글로벌 불평등 보고서와 불평등해소실천지표(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등을 통해, 불평등이 정책과 선택의 결과임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불평등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0번 과제로, 국가 안팎의 불평등 감소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평등은 국가 간 격차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위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빠른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의 이면에도 청년 세대의 불안, 돌봄의 불균형, 낮은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불평등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흔들며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성공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러한 성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IMF 경제위기라는 시련 속에서도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고, 팬데믹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OECD 국가 중 정책을 통한 불평등 감소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심과 변화, 정책에 따라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고,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살펴봅니다. 조세와 복지 제도, 젠더와 교육, 기후 위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다양한 영역에서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이 보고서의 이름인 ‘도넛’은 2012년 옥스팜 보고서¹를 통해 처음 소개된 이후, 전 옥스팜 연구원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케이트 레이워스에 의해 발전·확산된 도넛 경제학에서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도넛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조건과, 넘지 말아야 할 환경적 한계를 두 개의 동그라미로 설명합니다. 즉 도넛의 동그라미 안이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인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도넛 리포트는 소득과 자산, 사회지출, 젠더, 교육, 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조명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폭넓은 시각에서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불평등이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상기하고, 더 많은 시민이 대화에 참여해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더 공정한 사회로 변화하며 성장해 나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옥스팜 코리아는 앞으로도 가난과 빈곤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을 개선하고, 그 속에서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옥스팜코리아 대표 지경영

추천사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인권학회장

현 시대에는 기후-생태-사회의 3중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불안정과 지구환경의 교란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위기를 심화시키는 실정입니다. 사회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계층, 지역, 세대, 성별, 정치, 경제의 양극화가 지구시스템에서 벌어지는 기후-생태 위기의 결과이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사회의 와해와 지구환경의 균열을 잇는 연결고리가 바로 불평등입니다. 다시 말해 불평등의 해소는 사회 정의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핵심 개입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옥스팜의 보고서는 소득, 교육, 주거, 복지, 노동 등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할 뿐 아니라, 이를 완화할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가 사회생태적 대전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안내하는 귀중한 연구물입니다.

이윤과 속도, 경쟁에 지친 우리가 마음 한편으로 꿈꿔왔던 세상,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임을 증명합니다. 불평등은 결코 필연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발전 전략을 앞장서서 개척해 온 대표적 국제 NGO인 옥스팜의 한국 지부에서 이 보고서를 발간한 것 자체가 큰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 보고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사회개혁의 청사진으로 영감을 주며, 정책결정권자에게 영감 어린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평등 해소의 최전선에서 헌신해 온 옥스팜의
한국 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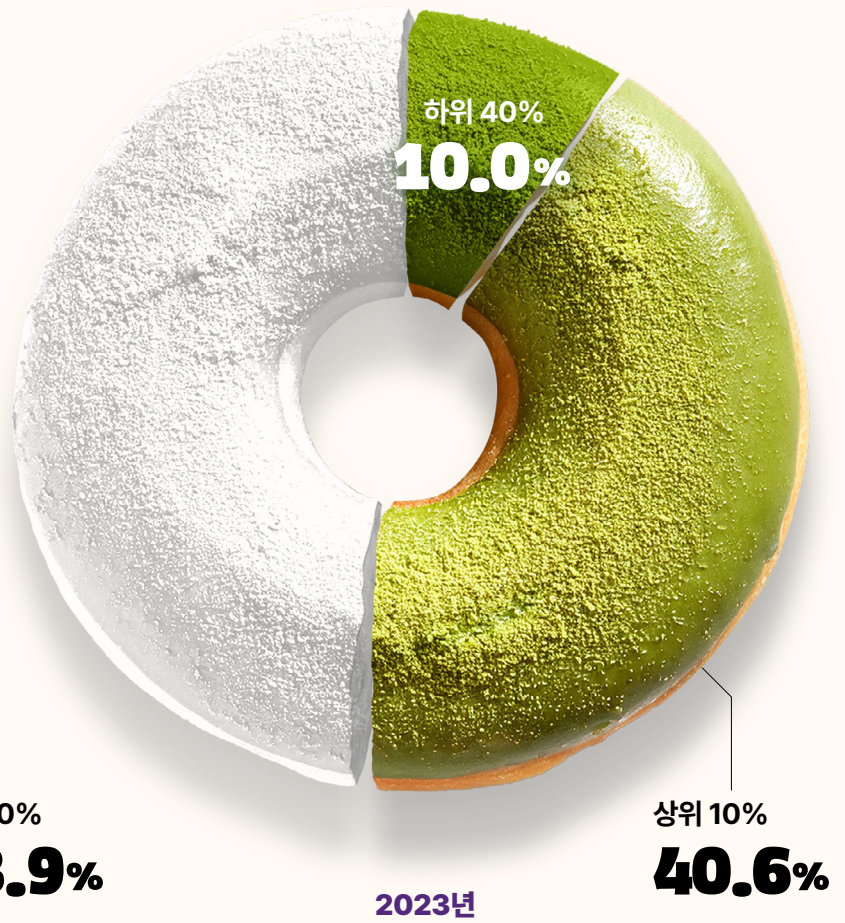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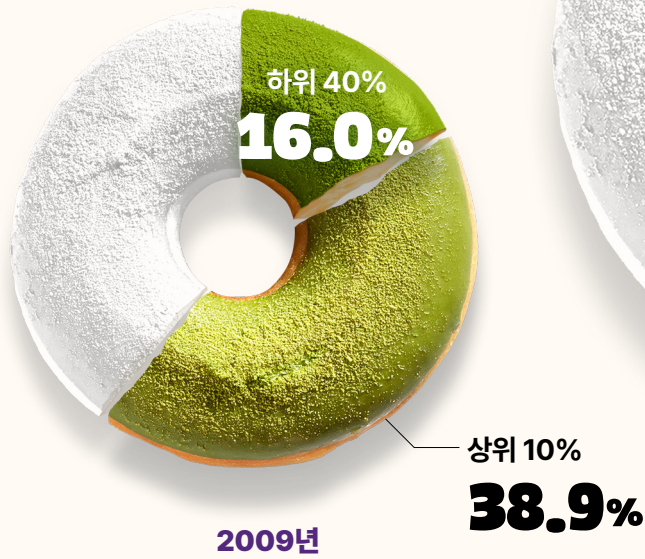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가속화된 불평등의 흐름과
최근 10년 사이 심화된 자산 격차를 명확한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이 불평등 세습의 통로가 되고
기후 위기가 불평등과 긴밀히 얽혀 있다는 분석은
경종을 울립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바라본 대목은
우리 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가불평등해소계획’
수립이라는 시의적절한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숫자로 보는 불평등

4.1배

상위 10%와 하위 40%의 격차
2.4배에서 4.1배로 확대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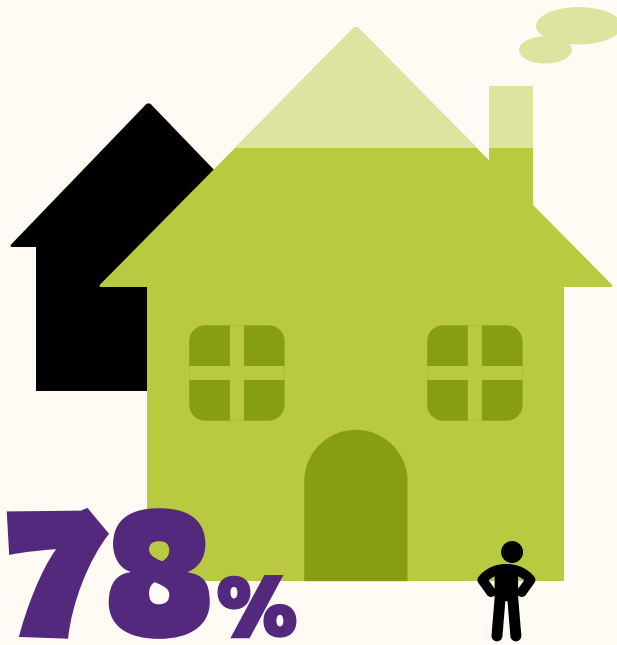
10% 포인트

빈곤한 이들의 사라진 몫

가장 빈곤한 하위 20%의 공적 이전 소득
14년간 45.2% → 35.8%, 약 10% 포인트 감소³

10명 중 2명 = 주택 자산의 78% 소유

다주택자 상위 20%가 대한민국 전체 주택 자산의
78% 소유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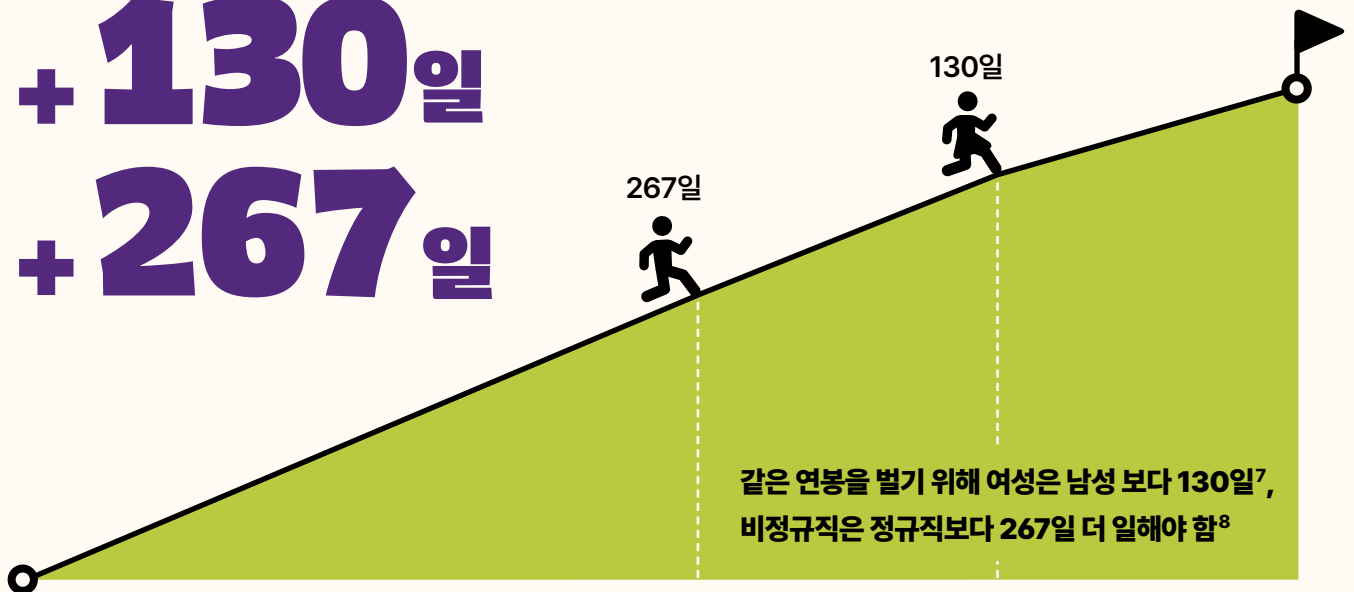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OECD 평균의 72% 수준⁵

72:100

소득 상위 0.1%
연봉만큼 벌기 위해
하위 50% 근로자가
일해야 하는 시간⁶

165년

+ 130일
+ 267일



성장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회

지난 30년간 한국의 GDP는 약 3배 성장했지만, 그 성과는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상위 10% 가구의 소득은 하위 10%의 20배에 달하고⁹, 상위 0.1%인 사람이 이틀도 안 돼서 버는 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절반의 1년 소득인 858만 원과 맞먹는다. 소득 하위 10%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평균 소득에 도달하는 데 150년이 걸린다.¹⁰ 개인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4%¹¹, 순자산 상위 20% 가구가 63.1%를 차지하며 부의 집중 역시 심화되고 있다.¹²

2011년부터 2025년 사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의 수는 3배, 자산 규모는 2.6배 증가한 반면¹³,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의 팔마 비율(하위 40% 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 비율)¹⁴은 2009년 2.4에서 2023년 4.1로 급등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220일¹⁵,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더 일해야 같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첫 자녀 출산 10년 후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33.4%까지 벌어진다.¹⁶

교육은 더 이상 공정한 출발선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은 하위 40% 학생보다 방과후에 매주 10시간 더 공부하고¹⁷, 사교육비를 2배 이상 쓴다. 의대와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의 가구 소득은 대학 미진학 가구보다 거의 2배 많다.¹⁸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는 100만 원 미만 가구보다 열에너지를 4배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¹⁹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6명은 기후변화로 인한 추가 생활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²⁰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62년부터 1992년까지 30년 동안 '고도성장의 시대'였다면, 1992년부터 2025년 동안 급속히 심화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평등은 단지 낮은 수입이나 빈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손상시킨다. 수십 년 동안 노인 빈곤율이 선진국 최고 수준이고,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사회경제적 차원의 남녀 격차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 미래를 주도할 청년 세대의 고용, 교육, 주거의 불안과 젠더 불평등은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1

경제 불평등: 상위 1% 가구, 자산 25.6% 차지,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

사회의 자원이 구성원에게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살펴봤을 때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1% 가구가 전체 소득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의 25.6%를 점유하고 있다.²¹ 2011년부터 2025년 사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의 수는 3배(13만 명 → 47만 6천 명), 자산 규모는 2.6배(1,158조 원 → 3,066조 원)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²²

상위 0.1% 1년 연봉을 벌기 위해 하위 50% 근로자는 165년 일해야 한다

개인 소득 최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약 14억 2,000만 원으로, 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평균 소득(858만 원)의 165.7배에 달한다. 하위 50% 근로자가 같은 소득을 벌기 위해 약 165년을 일해야 한다. 2023년 소득 중위값은 1,635만 원으로, 전체 소득자의 절반은 이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다. 소득이 중위값에 못 미치는 근로자 중 72.5%는 단시간·일용직이며, 기간제와 특수형태고용을 포함하면 대부분이 불안정 노동에 속한다.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 특히 낮아, 개인 자영업자의 65.7%는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에 머물러 있다.²³

생활비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분명해진다. 2인 가구의 경우 연간 평균 소비를 감당하려면 소득 상위 30%, 3인 가구는 상위 15% 수준이 되어야 한다.²⁴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불평등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 팔마 비율은 2009년 2.4에서 2023년 4.1로 증가했다. 15년 사이 상위 10%가 버는 돈이 하위 40% 전체가 버는 돈의 2배 수준에서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위 20%가 주택 자산 78% 차지, 부동산이 자산 격차를 결정한다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2022년 이후에는 다주택자 중 상위 20%의 자산 가치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동산 자산 불평등과 전체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부동산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고가 주택의 절대 상승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순자산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또한 빠르다. 2012~2024년 동안 20-30대의 순자산 증가는 40% 미만인 반면, 4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60% 이상, 80% 이상 증가했다. 반대로 청년층의 금융 부채는 가장 빠르게 늘었다. 20대의 금융 부채는 같은 기간 3배 이상 증가해 청년 가구의 자산은 천천히, 부채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에 놓여 있다.²⁵

숫자로 보는 불평등

상위 1% 개인 소득 비중 **10.7%**(2009년) → **12.4%**(2023년),
상위 10~60% 개인 소득 비중 **45.1%**(2009년) → **49.4%**(2023년)로 증가

하위 40% 개인 소득 비중 **16.0%**(2009년) → **10.0%**(2023년)로 감소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 **2.4배**(2009년)에서 **4.1배**(2023년)로 증가(팔마 비율)

개인 소득이 낮은 하위 50% 집단의 연평균 소득 858만 원으로
소득 상위 0.1% 연봉을 벌기 위해서 **165년**이 걸린다.

상위 10% 가구의 연소득(2억 2,042만 원)은 하위 10% 가구 연소득(1,073만 원)의 **20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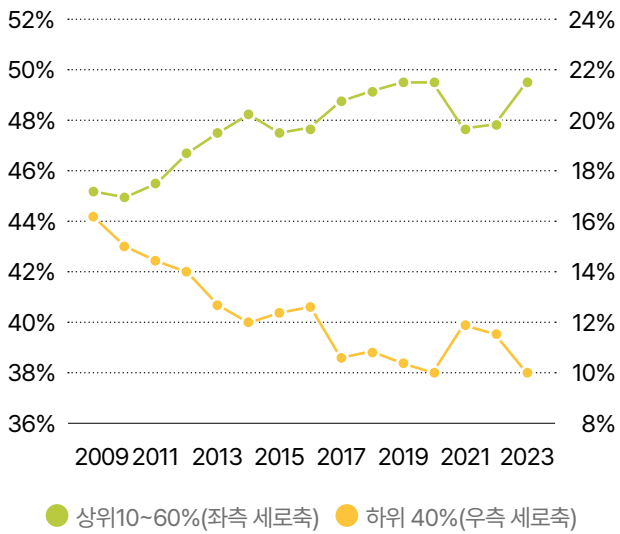
소득 하위 10%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평균 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150년**이 걸린다.

순자산 상위 20%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 중 **63.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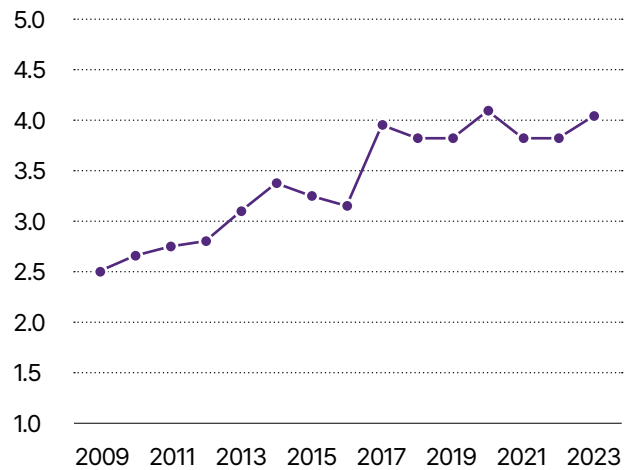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부동산 주택 자산 중 **78%**를 차지하고 있다.

20대 금융부채는 2024년 평균 **4,013만 원**으로, 2012년에 비해 **3.4배** 증가,
중장년층 평균이 2배 증가한 것에 비해 가장 빠르게 늘었다.

상위 10~60%와 하위 40% 소득 비중



팔마 비율(상위 10%/하위 40%)



계속 벌어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정체되면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24년 기준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53.9%에 불과하고,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023년 기준 30~99인 기업의 상대임금은 58.7%, 5~9인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체 임금은 50%에 불과하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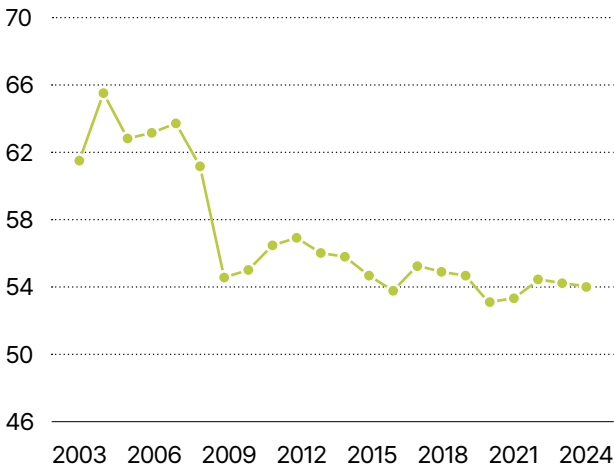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불평등

같은 연봉을 벌기 위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220일** 더 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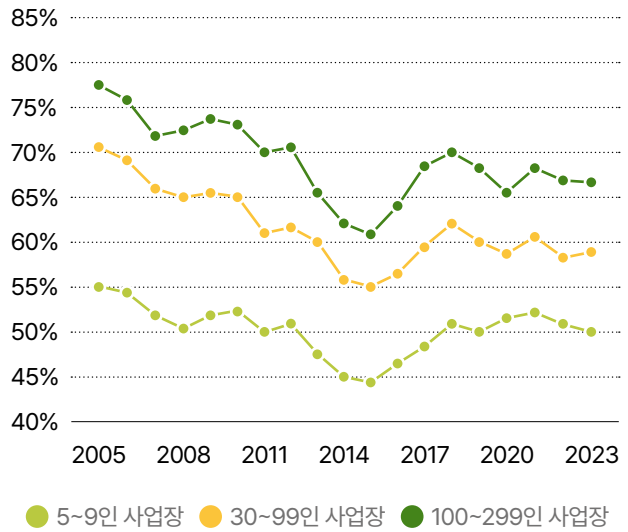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62.0%**(2003년) → **53.9%**(2024년)로 감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대임금은 **70.0%**(2005년) → **58.7%**(2023년)로 감소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가 마련을 위해 중위소득 노동자는 월급 전액을 **40년간** 저축해야 한다.²⁷

비정규직 상대임금(정규직=100)



중소기업 상대임금



2 복지과 불평등: 덜 부담하고 덜 보호받는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꾸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험료)은 평균(33.9%)에 비해 85% 수준(28.9%)으로 여전히 낮다.²⁸ 가구 형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국 가구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실효 부담률 역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평균 33% 낮다.²⁹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으로 언급되는 '낮은 조세부담과 낮은 복지수준'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몫은 오히려 줄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에서 주목할 특성은 주로 사회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말부터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된 것이다. 소득 하위 20%가 공적 소득이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2%(2009년)에서 35.8%(2023년)로 10%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복지 지출이 계층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OECD 평균만큼만 공공사회지출을 늘리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5.3%로, OECD 평균인 21.2%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이 공공사회지출을 10% 포인트 높이면 소득 불평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스웨덴 수준(사후 지니계수 0.29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사회지출을 5.7% 포인트 늘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을 21.9%까지 높이면 가능하다.³⁰ 팔마 비율 1.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위 40%에게 공적 이전 소득을 7.5% 늘리면 가능한데, 조세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³¹

숫자로 보는 불평등

복지가 가장 필요한 하위 20%가 받는 몫은 14년간 약 **10% 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의 세금, 사회보험 부담은 OECD 평균보다 **33%**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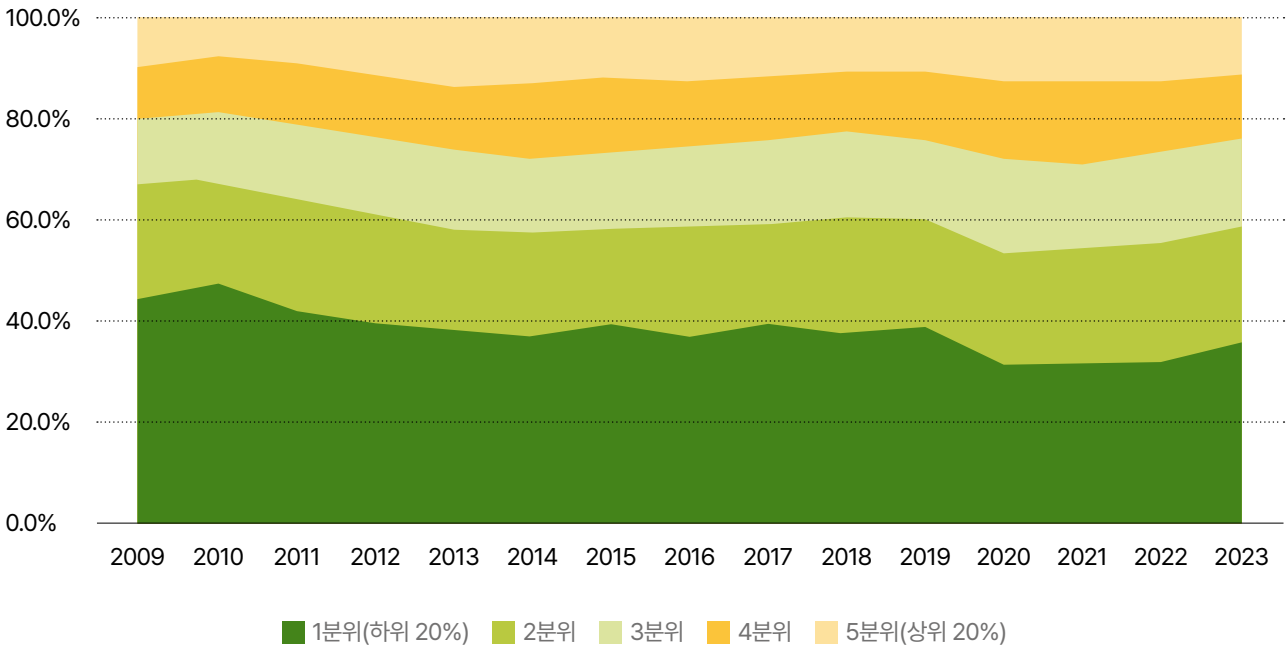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조세와 공공사회지출을 통한 소득 불평등 감소율은 OECD 평균의 **56.3%**에 불과하다.³²

OECD 평균만큼만 공공사회지출을 늘리면 복지 상위 국가 수준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³³

하위 40%에게 공적 이전 소득을 **7.5%** 늘리면 **팔마 비율** 1.0에 도달할 수 있다.

공적 소득이전의 분위별 비중의 변화, 2009~2023



3 젠더 불평등: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법·제도적 측면에서 성평등을 향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성평등 정책은 정치적·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 프레임'으로 소비되며, 구조적 문제보다는 개인 간 대립으로 왜곡되는 경향을 보인다.

달라진 사회경제적 환경 속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

오늘날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에 놓여 있다.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주거와 같은 자원은 그 어느 때보다 한정적이지만 경쟁은 치열하다. 과거 남성에게 주로 요구되었던 역할인 일과 경력 중심의 삶이 이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문제는 청년 세대가 일 중심의 개인적인 생존 전략을 추구하는 가운데 여전히 사회 곳곳에 성별에 따른 전통적인 기대와 의무감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결국 남성과 여성 청년이 같은 사회경제적 압력을 받으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과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모적인 논쟁, 갈등 프레임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생애주기 전반에서 누적되는 불평등

최근 몇 년간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고임금 일자리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2023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67%가 여성이었고, 이들 중 다수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했다.³⁴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중·하위층 분위에서 여성들이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에 몰려 있어, 낮은 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이 소득 궤적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혼 후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평균 8.9% 감소하고, 첫 자녀 출산 후 10년이 지나면 임금격차가 33.4%까지 확대된다.³⁵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돌봄 수요는 급증했지만, 공공 돌봄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간극 속에서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청년 여성일수록 '비혼·비출산'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청년 남성에게도 이 구조는 역설적 부담을 남긴다. 돌봄과 가사 노동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남성은 주된 생계부양자로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다.

'불평등한 평등'의 위험

최근 성평등 정책은 여성의 고용률 제고, 경력 단절 예방, 여성 리더십 확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이러한 접근은 고소득·고학력·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된 성평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돌봄 노동자 등 노동시장 주변부 여성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워 여성 내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저임금·비정규직 남성 역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으므로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적 재분배 전략이 필요하다.

성평등 제도의 실효성 강화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의사결정 참여 확대는 성평등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조건이다. 2022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여성 이사 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외이사 중심의 형식적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실제 경영 권한을 행사하는 내부 임원이나 최고경영진에서 여성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질적 성평등 지표를 공시·평가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 돌봄과 일터, 문화와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성평등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숫자로 보는 불평등

2025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 148개국 중 **101위**³⁶

관리자와 이사회에서 여성은 **6명 중 1명**, 국회의원 중 여성은 **5명 중 1명**이다.³⁷

육아휴직을 하는 엄마(73.2%)는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7.4%)보다 **10배** 많다.³⁸

출산 10년 후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33.4%**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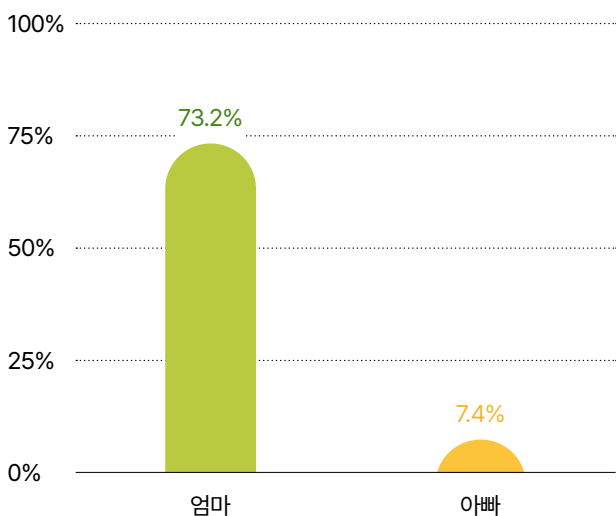
남성 10명 중 7명(69.6%) 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5명(52.7%)** 정규직³⁹

같은 연봉을 벌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더 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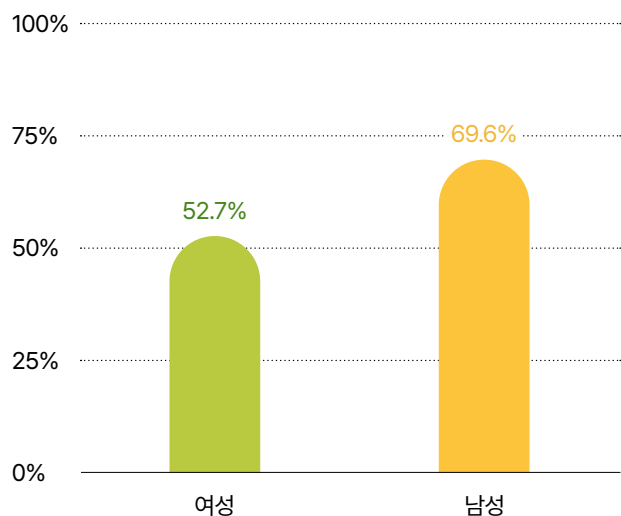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10명 중 8명**이 여성, 직종별 성별 분리 수준이 매우 높다.⁴⁰

저임금 여성 근로자(19.1%)는 남성(10.1%)에 비해 거의 **2배** 더 많다.

육아휴직을 하는 엄마(73.2%),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7.4%)의 10배



남성 10명 중 7명(69.6%) 정규직,
여성 10명 중 5명(52.7%) 정규직



4

교육 불평등: 교육은 다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작은 격차로 시작해 큰 차이로 확대되는 교육 불평등

교육 불평등은 처음에는 작은 차이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업 성취, 대학 진학, 직업 및 소득, 건강에 이르기까지 삶 전반에 큰 격차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취학률로 인해 겉보기에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주 지역, 가정의 경제적 여건,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접근 가능한 교육 자원과 학습 환경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학교가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가정이 보유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된다. 가정의 노동 조건, 돌봄 환경, 주거 여건, 디지털 기기·사교육과 같은 교육 자원 등 자원의 격차는 장기적 불평등을 낳는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

교육적 성취는 가정환경·자원·정서적 안정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가정의 배경이 좋을수록 학습 시간이 길고, 같은 1시간의 공부라도 성취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유의미하게 드러났다.⁴¹ 계층 수준에 따라 방과후 학습 시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경제력뿐 아니라 시간이라는 자원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의 동기·행동·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정 배경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이 오히려 교사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경험함으로써 격차를 완화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과 하위 40% 학생의 지지 경험에 큰 격차가 나타났다. 하위 40% 학생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효능감에서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⁴² 학습지원 체계가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숫자로 보는 불평등

의대,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의 가구 소득은 대학 미진학 가구보다 거의 **2배** 많다.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은 하위 40%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2배** 이상 쓴다.⁴³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은 하위 40% 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⁴⁴

사회경제적 배경 하위 40% 학생은 상위 10% 학생보다 디지털 자원 활용 효능감이 현저히 낮다.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의 수학성취도는 하위 40% 학생보다 **1.2배** 높다.⁴⁵

5

기후 불평등: 책임은 위에, 피해는 아래로

새롭게 등장한 기후취약계층

기후불평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현상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유발한 책임과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사회집단 간에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 세계적으로 고소득 집단일수록 1인당 탄소배출량이 높지만 피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더 큰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돌봄과 복지, 정보 접근성 격차로 인해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주목할 것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집단에서도 높은 기후변화 취약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옥외근로자, 도시의 열섬 현상에 취약한 1인 가구, 폭염과 침수 위험에 노출된 낙후 지역 거주민,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가지는 취약 산업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청년 1인 가구 등 새롭게 출현하는 취약집단까지 고려한 맞춤형 적응 정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빈곤의 악순환

한국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 사회적 고립과 일상의 삶의 질 저하 등 다각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고, 근로 소득과 노동 생산성의 저하를 유발하며, 저소득층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⁴⁶ 한국의 노동생산성 저하는 여름철 이상고온에 의한 단기 실업률 증가, 겨울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임시 일용근로자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⁷

숫자로 보는 불평등

월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는 월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보다 열에너지를 **4배** 더 많이 사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명 중 6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비 추가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의 온열질환자 중 **26%**는 단순노무종사자이고, 발생 장소 **3곳 중 1곳**은 실외작업장이다.⁴⁸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 **2명 중 1명**이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⁴⁹

6

우리에게는 불평등을 해결할 힘이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국가이다. 지난 30년간 GDP가 3배 성장했고, IMF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지 지출을 늘려왔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제도 등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강해왔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최근 증가한 자산 불평등이 사회 이동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이다. 불평등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면 향후 10~20년 동안 중장기적 차원에서 경제 성장률, 기술 혁신, 사회 이동성, 기회의 평등, 빈곤 완화, 삶의 질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불평등 완화는 사회 통합, 창의적 기업가 정신, 국민의 행복을 위한 토대다. 불평등 위기의 시대에 한국 사회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

변화를 위한 제언

1. 분배의 방향을 바로잡으면 더 공정해질 수 있다

한국의 불평등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몫이 줄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확대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 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소득 지니 계수 0.3 미만 또는 팔마 비율 1 이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불평등감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⁵⁰

2.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돌봄 노동자 등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등 차별받을 수 있는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보장 전략이 필요하다.

3. 청년을 위한 정책,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청년기의 고용·주거·부채 불안은 이후 생애 전반의 격차로 이어진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복지·교육·노동 정책을 부담이 아니라 세습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이동성을 회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청년 대상 주거·자산 형성 지원 확대, 청년 사회보험 강화 및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4. 성평등 사회제도의 개선과 실질적 작동이 중요하다.

돌봄의 공적 책임,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 한국의 제도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틀을 갖추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제 결과가 달라지도록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임금 정보 공개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 도입을 비롯해 공공 돌봄 사회기반시설 확대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 교육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교육 정책은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 사교육 의존을 낮추고,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연계한 공공 학습 지원과 디지털·AI 기반 학습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소득·주거·노동 조건에 따라 피해가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해,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기후 적응 정책과 에너지효율·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구조적인 피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가속화되는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확대시키며, 이에 대한 대응이 미뤄질수록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해야 더 공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불평등에 대응하는 노력은 단순한 갈등 관리 차원을 넘어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주

요약본

- 1 A Safe and Just Space for Humanity(Oxfam International, 2012)
- 2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계산
- 3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UK: Polity Press, 윤홍식(2019)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4 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2024
- 5 OECD. (2025c) Social expenditure-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접근일, 2025. 9. 20). 윤홍식. (2019).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6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계산, 취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 낮은 하위 50% 집단의 평균 소득은 858만 원이다. 최상위 0.1% 집단의 평균 소득은 하위 50% 집단 평균 소득의 165.7배이다.
- 7 2023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 29.3%, 주 40시간, 월 209시간, 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
- 8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데이터처),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자료 이용하여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계산, 2023년 기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4.0%, 주 40시간, 월 209시간, 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
- 9 국가데이터처. 2024.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가데이터처
- 10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ECD
- 11 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2023
- 12 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2024
- 13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5),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
- 14 팔마 비율(Palma ratio): 하위 40% 인구의 소득이 상위10%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될 때까지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표로,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함께 옥스팜이 불평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로 지지하고 있다.
- 15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54.0%,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대임금 58.7% 주40시간, 월209시간, 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
- 16 Lee Kyeongah, 2022. "The gender wage gap: evidence from South Korea," IZA Journal of Labor Economics, Sciendo &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 GmbH (IZA), vol. 11(1), pages 1-36, January.
- 17 PISA 2015
- 18 심재휘, 전하람 (2025). 대학 진학 선택의 불평등 실태와 변화: 재수·반수 선택의 계층화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5(2), 103-130
- 19 에너지총조사(2019~202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사항목 중 '가정부문 월소득별 표본가구당 에너지소비량'(국가통계포털, 2025)에 기반하여 김윤정(한국환경연구원) 작성.
- 20 김윤정 외, (2024),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 환경부.
- 21 World Inequality Database. (2023) <https://wid.world/> 2025년 11월 20일 검색

- 22 국가데이터처. 2024.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국가데이터처.
- 2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 24 가계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 25 가계금융복지조사(국가데이터처)
- 26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데이터처),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자료를 이용하여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계산.
- 27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13억 4,543만 원으로 집계된다(KB부동산, 2025).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월 중위소득은 278만 원으로, 연 환산 시 약 3,336만 원이다(국가데이터처, 2025). 임금근로자가 중위소득 전액을 저축한다는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 서울 평균 아파트 1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약 40년이며, 소득의 30~50%만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기간은 약 80~130년으로 늘어난다.
- 28 OECD (2025d) Global Revenue Statistics-Comparative tax revenues. OECD Data Explorer. (접속일, 2025. 9. 21).
- 29 일반적으로 저임금층, 평균임금층, 고임금층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표로, 평균임금의 67%는 저임금층, 100%는 평균임금층, 167%는 고임금층으로 이해할 수 있음. OECD (2025e) Taxing wages 2025: Decomposition of personal income taxes and the role of tax reliefs. Paris: OECD Publishing.
- 30 OECD 목표의 경우, 목표 지니감소율은 32.3%이며 한국의 현 지니감소율은 18.2%이다. 따라서 $\Delta R = 0.323 - 0.182 = 0.141$ 이다. 회귀계수 $B=0.014$ (지니감소율 모형)를 적용하면 Δ 사회지출비율 = $(0.141 \div 0.014) = 10.1\%$ p가 된다. 따라서 사회지출목표는 $16.2\% + 10.1\% = 26.3\%$ 로 추정된다. 독일 목표의 경우, 사후 지니계수는 0.303이며 한국의 현 지니계수(0.324) 대비 $\Delta G = 0.021$ 이다. 사후 지니계수 모형(회귀계수 $B=-0.006$)을 적용하면 Δ 사회지출비율 = $(0.021 \div 0.006) = 3.5\%$ p가 된다. 따라서 사회지출목표는 $16.2\% + 3.5\% = 19.7\%$ 로 추정된다. 스웨덴 목표의 경우, 사후 지니계수는 0.290이며 한국의 현 지니계수(0.324) 대비 $\Delta G = 0.034$ 이다. 동일한 모형(회귀계수 $B=-0.006$)을 적용하면 Δ 사회지출비율 = $(0.034 \div 0.006) = 5.7\%$ p가 된다. 따라서 사회지출목표는 $16.2\% + 5.7\% = 21.9\%$ 로 추정된다.
- 31 목표치 달성에 필요한 재분배 규모는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를 계산한 뒤, 그 차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은 상위 10%에서 줄여든 몫이자 동시에 하위 40%에 추가로 이전되는 몫을 뜻한다. 아울러 이 금액을 상위 10%가 현재 부담하는 세금 총액과 비교한 비율이 곧 상위 10%의 세수 증액률이고, 하위 40%가 현재 받는 이전소득 총액과 비교하면 하위 40%의 이전소득 증액률이다.
- 32 한국의 조세와 사회지출의 소득 불평등 감소율(18.2%)은 OECD 회원국 평균(32.3%)의 56.3%에 불과하다. OECD (2025f) Government at a glance 2025. Paris: OECD Publishing.
- 33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수준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사회지출을 21.9%까지 높이면 되는데, OECD 국가들 평균 수치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서 감당하지 못할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 34 비정규직 비중 3년 만에 증가...노인,여성 시간제 일자리 늘어, 한겨레 (2024-10-2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3824.html
- 35 Lee Kyeongah, 2022. "The gender wage gap: evidence from South Korea," IZA Journal of Labor Economics, Sciendo &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 GmbH (IZA), vol. 11(1), pages 1-36, January.
- 36 World Economic Forum (WEF). (2025).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5.
- 37 관리직 여성 비율과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16~17%(2025 유리천장 지수), 22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 20.0%

- 38 육아휴직 사용률(2023년 출생아 기준)
- 39 KLI, 2025 노동통계 2. 인구 및 고용
- 40 임연규(2025), 통계로 보는 여성: 2024년 여성의 노동 및 임금 현황, 젠더 리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1 전하람 (2024). 능력주의의 그림자로서의 노력 불평등: 가정배경에 따른 공부시간 격차 및 공부시간-학업성취 관계 조절. 교육연구논총, 45(3), 5-35.
- 42 PISA 2022
- 43 ESCS(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는 PISA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가정배경 지표로,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정이 보유한 학습·문화 자원을 결합해 산출한 종합 지수이다. 학생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 간·집단 간 교육 격차 분석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된다. 교육부 (2025).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 44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The State of Learning and Equity in Education,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3f23881-en>.
- 45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The State of Learning and Equity in Education,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3f23881-en>.
- 46 Zander, K. K., Botzen, W. J. W., Oppermann, E., Kjellstrom, T., & Garnett, S. T. (2015). Heat stress causes substantial labour productivity loss in Australia. Nature Climate Change, 5(7), 647-651.
- 47 심명규 외. (2025). 기후변화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제2025-4호.
- 48 질병관리청(2025)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약 500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기반으로 한다.
- 49 김윤정 외(2024)는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노인, 장애인, 1인가구 등 포함) 약 2천명을 대상으로 3가지 문항('폭염 때 사람을 만나기 싫어진다.', '폭염 때 더워서 약속을 취소한 적이 있다.', '폭염 때 집에만 있게 된다.')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가 0.75 이상인 경우를 사회적 고립 경험비율로 제시하였으며, 전체 약 49%, 노인·장애인 43%, 1인가구 45% 등으로 나타났다.
- 50 J. Stiglitz et al. (2025). G20 Extraordinary Committee of Independent Experts on Global Inequality. Accessed 6 November 2025.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한국 불평등;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



1942년 영국 옥스퍼드 학술위원회에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옥스팜은 물·위생·보건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전 세계 약 80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기구입니다.